

제8차 한·미 21세기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 보고서

2003. 12.

주최: 세계경제연구원(IGE) ·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IE)

후원: 한국국제교류재단(KF)

제8차 한·미 21세기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 보고서

2003. 12.

‘제8차 한·미 21세기위원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2003년 10월 21~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경제연구원(IGE)와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가 공동개최하였음.

목 차

제1주제 : 한·미 정치 및 안보관계	5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원인과 대처방안 / 김 경 원 前 주미대사	5
미국의 최근 대북정책 / Charles Pritchard 前 대북특사	6
한국의 최근 대북정책 평가 / 전 봉 근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7
토 론	8
특별연설 / Paul Wolfowitz 국방부 장관	11
제2주제 : 한·미 경제현황과 정책과제	13
한국경제 현황 및 전망 / 사 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13
미국경제 현황 및 전망 / Martin Baily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4
한국의 외환정책과 달러약세 / 최 중 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15
미국의 달러약세 정책 / C. Fred Bergsten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16
토 론	16
제3주제 : 한·미 투자 및 통상협력	19
미국 의회와 무역정책 / Calvin Dooley 민주당 하원의원	19
한국 무역정책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입장 / Alan Larson 국무부 차관, 경제·농업·비즈니스 담당	20
한·미 FTA에 대한 고찰 / Jeffrey Schott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
한·미 FTA에 대한 전략적 접근 / 정 인 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1
토 론	22
부 록	
회의일정	27
참가자 명단	29

제1주제: 한·미 정치 및 안보관계

주제 발표

■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원인과 대처방안 (김 경 원 前 주미대사)

○ 한·미 동맹이 냉전시대와는 달리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1) 汎세계적 탈냉전과 한반도 냉전간의 괴리

- 냉전의 종식으로 한·미 동맹관계의 근거가 약화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 냉전 종식으로 한국은 예전의 공산권 국가들과 교류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임.
- 따라서 공산권에 공동으로 대항하던 동맹관계가 당연히 퇴색한 것으로 보여짐.

2) 북한과 미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변화

- 북한 공산주의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준 구원자,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교사로서의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냉전종식 이후 바뀌기 시작함.
- 미국의 이미지는 한반도에서조차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의 이미지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음. 한국 국민에게 미국의 이런 모습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짐.

3) 한국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세대간 역사인식의 차이

- 한국 국민은 각 세대별로 역사적 경험이 매우 상이함. 우선 한국전쟁을 겪고 산업화를 이룩한 舊세대와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로 특징지어지는 新세대간에 역사인식에 대한 간격이 매우 큼.
- 이와 같은 세대간 역사인식의 격차로 인해 젊은 세대들에게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사이에 협력과 경쟁의 규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도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동맹관계를 악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음.

- 북한 공산세력에 의한 남침으로 발발된 6.25는 대한민국 내에서 좌파세력의 입지를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그 결과 우익세력의 권력 독점화 현상이 지속되어 왔음.
 - 좌 · 우파간에 공존의 틀이 없기 때문에 대북 문제에 관하여 타협보다는 대결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것이 한 · 미간 동맹관계에 부담으로 작용.
 - 미국은 이와 같은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한국이 처한 국내적 딜레마(dilemma)를 포용하는 자세가 한 · 미관계 공고화에 매우 필요함.
- 한 · 미 동맹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 미 양국이 처한 서로 상이한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문제에 관해 어떠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임할 것인지에 관한 진지한 로드맵(road map)을 공유해야 함.
- 특히, “압박”과 “협상”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함.
 - 한 · 미 관계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내 좌우세력간 “게임의 규칙”이 마련되어 건설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게임의 규칙” 부재로 인해 한 · 미관계가 불필요한 희생양이 되고 있는 측면이 큼.

■ 미국의 최근 대북정책 (Charles Pritchard 前 대북특사)

- 최근 방콕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 안전보장에 관한 다자간 서면확인을 언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후 美 · 北간에 진지한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
- 그 동안 미국은 대북문제에 대해 진지한 개입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특히 미국은 지난 4월에 있었던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전략적 실수를 범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지지를 상실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부시대통령은 북한의 의견을 청취할 의지가 있음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됨.
- 6자회담이 현재로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대화형식임에는 틀림없으나 美 · 北간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양자대화에 의해 보충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6자회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대화형태가 될 수는 없으며 실무선에서 다양한 레벨(level)의 대화도 진행되어야 함.
 - 다양한 레벨의 실무선 대화를 통해 북한 안전보장에 대한 정확한 합의를 이루고 동시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결에 대한 올바른 합의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결국에는 협상에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동결 합의를 먼저 위반한 것은 북한이므로, 향후 美·北간 협상진전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도 북한이 먼저 취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임.

■ 한국의 최근 대북정책 평가 (전봉근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 80년대 말부터 한국정부가 추진하여 온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가능함.

1) 노태우·김영삼정부

- 노태우 및 김영삼 정부 시절 추진된 남북대화정책은 남북기본합의문 등 형식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북핵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2) 김대중 정부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교류협력 확대 등 남북관계의 대도약(Big Jump)을 달성하였으나, 국민적 합의, 정책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하여 “피주기”, “남남갈등”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음.

3) 노무현 정부

- 現 노무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와 번영의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원칙과 기초를 계승하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개선함.
 - 특징으로는 첫째, 교류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분야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
 - 둘째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안정을 위하여 주변국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하여, 남북대화와 병행하여 다자적·지역적 접근방법을 중시함.
 -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햇볕정책의 한계를 인식하여,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사업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생산하도록 관리함.
 - 남남갈등의 끈을 메우기 위하여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국내적 합의조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함.

○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함.

-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고 유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참여

하도록 함.

-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으나, 실제로 「의미있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지난 수년간에 걸쳐 북한의 암시장이 농민시장, 그리고 종합시장으로 발전하였고, 한국경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박봉부 화학상이 총리가 되었으며, 금강산관광·개성공단프로젝트 등 남북협력사업에 적극적이며, 경제개선관리 조치로 임금과 시장가격요소를 도입하였음.
 - 이러한 변화는 90년 초반의 상징적 개방조치(나진선봉지구, 합영법 등)가 모두 실패한 것과는 대조적임.
 - 대북평화정책의 결과 남·북한간 인적교류가 상당히 확대되어 많은 남측인사가 북한을 방문한 것도 북한을 변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정학적 및 경제적 파장을 항상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제한되어 있음

토 론

■ 북한 핵문제에 관한 상황인식

- 미국측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은 상황은 지속되기 어려움을 피력함.
 - 기본적으로 미국측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며 무기수출과 핵연료 처리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긴장관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 북핵으로 말미암아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장이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평가.
 - 북한의 경제상황은 앞으로도 악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어떤 형태로든 제공해야 리스크(risk)를 감소시킬 수 있음.
- 현 상황에는 아직 많은 리스크 요인이 잠복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군사적 대응을 유발할 만한 자극적인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미국측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나 보다 현실적인 대응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될 것으로 예상함.

■ 북한 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과 한·미 양국의 접근방식

- 미국측도 부시행정부가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지는 않음.

- 미국은 북한이 이미 1994년 이전에 핵무기 1~2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함.

- 한국측도 이러한 미국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특히, 그 동안 대북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이 다소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함.

- 그 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압과 협상 정책 중 어느 쪽도 확실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직접적이고 진지한 접근을 피해온 것으로 보임.

- 부시행정부 초기에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부를 만큼 북한 핵문제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시사하였으나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점차 누그러졌음.

- 결국 부시대통령이 방콕에서 언급한 대북 안전보장에 관한 메시지는 미국이 제2의 이라크를 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북한은 미국의 이런 메시지를 북한이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결국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지적.

- 한국측은 대북문제에 접근하는 한·미 양국간의 정책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음.

- 미국은 북핵문제를 글로벌 차원에서 바라보지만 한국은 북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는 것도 차이점임.

- 북핵문제에 대해 양국이 인식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

- 북한정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인식차이가 없으나 북한에 대한 최선의 접근방법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고 있음.

- 現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믿고 있음.

■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향후 방안

-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향후 취해져야 할 방안에 대해,
 - 미국측은 미국이 북한과 양자대화를 한다면 이는 심각한 실수이며 6자회담이 북한과의 대화에 적합한 장소임을 강조.
 - 미국은 향후 북한과 지속적으로 진지한 대화를 해나가되, 협상과정과 그 결과가 6자회담 참가국이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 대화가 지속되면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될 것이며 북한이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수용하는 경우 주변국(6자회담의 5개국)으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명백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
 - 한국측은 북한이 그 동안 상당한 인내를 보여 왔으며 봉쇄나 고립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이 유일하게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정책임을 강조.
 - 한국측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강압의 정책을 선호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함.
 - 그 이유로 미국은 강압정책을 추구하는 명백한 목표가 없으며 이 정책을 추진할 만한 국내외적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함.
 - 또한 북한도 한국이 대북 강압정책에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미국의 강압정책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 역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측의 적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행태를 종합하건대,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선 측면이 큼.
 -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협상에만 치우친 반면, 부시 현 행정부는 강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현실적인 방안은 강압과 협상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임.
- 이라크와 북한이 다른 점 중 하나는 이라크의 경우 군사적 방안이 추가된 반면, 북한은 경제적 인센티브나 압박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크다는 점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대처해 나가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큼.

특별연설 : Paul Wolfowitz 미국 국방부 부장관

- Paul Wolfowitz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특별연설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주한미군, 이라크 파병 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설명을 하였으며, 연이어 양국 참가자들과의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음.

 - 그러나 Wolfowitz 부장관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특별연설 및 토론 내용은 이 보고서에 기술되지 않음.
-

제 2주제: 한·미 경제현황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

■ 한국경제 현황 및 전망 (사 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한국경제는 1999년 10.9%의 고성장을 달성할 정도로 외환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함. 2001년의 3.1% 성장률도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것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한 성장세였음.

- 이와 같은 한국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중심축을 담당해 왔음.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수출 및 투자 증가가 큰 역할을 하였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이후 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음.
- 최근에는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소비마저도 둔화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민간소비 지출도 올 2/4분기 2.2%의 감소를 기록하여 소비둔화로 인해 2003년 경제성장 전망이 불투명함.
- 지난 2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민간소비지출은 가계부문의 과도한 부채와 가계대출 억제 등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소비의 감소를 보충하는 투자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한국경제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음.

- 수출은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더라도 투자가 증가하면 성장동력은 유지될 수 있겠으나, 현재 한국경제는 투자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임. 올 2/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0.8%로 극심한 침체를 보임.
-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 투자에 유리한 금융환경을 만들었으나 노동비용의 증가, 노사갈등 악화, 정치적 불안, 정책집행의 일관성 부족이 투자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 외국인 투자도 급감하여 투자부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 내년에는 불안하나마 4~5%대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올해는 3%대 성장을 달성하기도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내년에는 미국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는 등의 대외여건 개선에 힘입어 한국경제도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완만히 개선되고 있는 소비 및 투자 심리가 내년에는 상당히 개선되어 성장세 회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노동문제, 정치적 불안정 등의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내년 경제성장 전망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임.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안정 등은 현 정부가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반드시 이룩해야 할 숙제임.
- 내년에는 경제문제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표명이 있어 왔으므로 불확실성 제거로 인한 투자심리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하며, 그 외 미국경기의 회복 등으로 내년에는 4~5%의 성장을 기대.

■ 미국경제 현황 및 전망 (Martin Baily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미국경제는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켜진 상태임. 3/4분기 6%대 성장이 예상되며 4/4분기에도 5%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됨.
- 민간소비가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투자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음.
 - 특히 하이테크 산업이 투자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효과까지 겹쳐 상당 기간 양호한 성장이 예상됨.
 - 실업률이 여전히 6%대를 유지하는 등 노동시장은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 부문의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억제 및 소득증대에 유리한 상황임.
 - 미국경제의 생산성 향상은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초래한 노동비용의 감소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IT에 의한 생산성 증대 효과는 과장된 것으로 보임.
 - 내년에는 일본경제의 회복, 유럽의 성장세 확대, 중국의 지속성장 등 외부여건과 내부여건의 호전에 힘입어 미국경제도 성장세가 증가하여 연간 4%대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역사상 최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언젠가는 감소될 것이며, 그 조정과정에서 미국경제 내에 급격한 자원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주택건설부문은 급격히 위축되고 수출부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몇 년간 고성장이 예상되는 미국경제의 호황이 한국경제에 득이 될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 자체의 개혁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
 - 지속적인 자유화 정책의 추진으로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임.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계 일류기업과 국내기업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이 미국경제 성장의 혜택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경쟁촉진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의 외환정책과 달러약세 (최 중 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음.
 - 정부의 역할은 환율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소극적 안정화 정책에 그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환율조작을 하고 있다는 일부 미국 제조업체의 주장은 오해임.
 - 주요 아시아 국가 중 변동환율제를 완전히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며 2002년 1월부터 2003년 10월 사이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는 달러에 대해 각각 12.6%, 19.9% 평가절상 되었음.
 - 특히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환율은 원화가 10.8%, 엔화는 7.0% 절상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한국 원화는 미국의 평가절상 요구대상으로 적절치 않음.
 - 또한 미국 무역적자의 2.2%만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21.3%에 비교하면 큰 문제가 아님.
- 달러약세 정책은 대미수출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아시아 경제 뿐 아니라, 미국경제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임.
 - 아시아 각국은 미국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주요 고객이므로 달러약세로 경기가 악화될 경우, 아시아 경제는 미국의 서비스 구입을 줄이게 되어 미국 서비스 부문의 경기가 침체될 것임.
 - 지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미국 산업구조가 전통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바뀐 점을 감안하면 달러약세 정책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임.
 - 지속적인 달러약세로 달러가치가 불안해지면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보유고를 유로화로 대체하

게 되며, 이는 달러화의 기축통화 기능이 약화됨을 의미함.

- 또한 유로화 선호가 유발될 경우, 자금유출이 발생하고 미국 국내금리가 상승하여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가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음.
- 이와 같이 지속적인 달러약세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외로 크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재고할 것을 주문함.

■ 미국의 달러약세 정책 (C. Fred Bergsten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 최근의 달러약세 정책은 중국 위안화를 겨냥한 것이며 상당폭(20~25%)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전제로 한 원화절상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원화약세를 초래할 것임.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5%에 육박하며 純대외부채 규모는 3조 달러에 달하고 있음.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국은 휴일을 제외한, 매일 40억 달러의 자본을 해외에서 빌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이와 같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불가능하며 달러가치의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감소되어야 함.
- 달러가치의 조정에는 그 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누려왔던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조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
- 특히 중국 위안화가 통화가치 조정의 핵심인데 20~25% 정도의 환율조정이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감소에 적절하다고 봄. 환율제도 자체의 변경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토 론

■ 환율문제

- 위안화 절상과 관련하여 미국측에서는 위안화 절상이 중국 거시경제의 조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을 주장.
- 위안화 절상은 중국경제의 과열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엔화의 절상은 위안화의 절상에 비한다면 덜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

- 변동환율제도 도입이나 중국 자본시장의 자유화 등은 아직 중국에게 시기상조라는 데에 미국측도 공감을 표시.
 - 위안화와 엔화의 평가절상 등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환율질서의 확립이 요구되는 바, 미국측은 동아시아 지역의 환율체제 확립을 위해 한국이 주도하여 “신라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하기도 함.¹⁾
- 한국측은 급격한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중국 경제와 사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아시아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켜 제2의 아시아 금융위기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강조.
- 과도한 평가절상은 중국경제에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으며 중국에게 권유해야 할 것은 통화 가치 조정보다는 금융구조 개혁임.
 - 중국은 무역자유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금융개혁(부실채권 처리 등)을 동시에 실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국경제의 구조개혁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global leadership)을 발휘하여 중국에게 무역자유화, 금융개혁, 평가절상 등 세 가지 정책의 시행을 적절한 수준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국측은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미국측의 주장처럼 한국경제에 꼭 이롭지만은 않음을 지적.
-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구조적인 측면이 큼. 즉, 한국의 컴퓨터, 반도체, 섬유 부문 등의 기업들이 생산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임.
 - 그 결과, 위안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한 원화의 상대적인 평가절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위안화는 저급기술 제품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엔화는 고급기술 제품의 경쟁력과 관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함.
 - 이는 원/달러 환율이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제품의 전반적인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임. 그러므로 미국의 달러약세 정책은 한국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한국측의 주장에 대해 미국측은,
- 중국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한국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별 변화가

1) “신라합의(Shilla Agreement)”는 1985년 G-5 국가들 간에 이루어진 “Plaza Agreement”처럼 환율에 관한 새로운 질서를 한국 주도로 서울의 신라호텔에서 주최하는 구상임.

없으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 함.

-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여 중국산으로 미국시장에 수출한 측면도 있겠지만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나 일본 기업은 위안화 절상을 지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봄.
- 이미 상당수의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였으므로 위안화 절상은 한국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위안화 절상의 직·간접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분명 한국경제에도 이익이 됨.
- 물론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고급기술 위주의 기업으로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위안화 절상으로 얼마나 많이 한국으로 돌아오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임.

○ 한국측은 한국이 일정규모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함.

-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 40%는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임. 이와 같이 자본이동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한국은 급격한 자본이동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상당 규모의 외환보유고가 필수적임.
- 또 다른 이유는 갑작스런 남북통일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임. 통일 이후 북한경제 재건을 위해서도 외환보유는 필요함.

■ 미국경제 전망

○ 미국측은 내년도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예상외로 느려질 수도 있음을 지적.

- 저금리로 촉발된 주택부문의 대출조정 붐(refinancing boom)이 끝나고 그 동안 증가되었던 부채의 부담으로 개인파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대규모의 재정적자는 장기이자율을 상승시키게 되어 주택융자금 이자율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와 주택부문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음.
-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줄일 것이며 연방정부의 군사비 지출도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성장을 멈춘 상태로서 1980년대처럼 공실률(vacancy rate)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음.
- 그 동안 이어진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품의 가격하락은 별로 발생하지 않았음. 즉, 환율전가(pass-through)효과가 크지 않음을 의미함.
-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자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추진하고 달러약세를 유지하게 되면, 달러강세에도 하락하지 않던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
- 이런 리스크 요인들로 내년 미국경제는 4%대보다는 3%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더 큼.

제 3주제: 한·미 투자 및 통상협력

주제 발표

■ 미국 의회와 무역정책 (Calvin Dooley 민주당 하원의원)

- 대외무역정책 시행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양당의 공조를 구하기가 점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음. 작년 8월에 통과된 무역증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도 단 한 표차로 통과되었음.
 - 이와 같은 정치권의 분위기는 지역구의 이익에 보다 충실하려는 정치인들의 성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민주당의 경우 노동조합의 이익에 더욱 충실하려고 함.
- 이와 같은 정치권의 기류가 향후 예상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바임.
 - 싱가포르 및 칠레와의 FTA가 과반수이상의 지지와 민주당의 강력한 지원 속에 성사되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 찬성 의원도 75명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음.
 - 美·中美 FTA(Central American FTA, CAFTA)와 美·호주 FTA 등은 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만약 체결에 실패할 경우 美 의회 내에서의 자유무역정책 추진력 약화가 예상됨.
- 부시행정부는 DDA의 추진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다른 국가들의 DDA 추진현황을 지켜보기로 하는 한편, 정치권의 공조를 전제로 FTA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FTA는 현재 미국이 추진 가능한 가장 바람직한 무역정책이지만 그 한계도 분명함.
 - CAFTA나 호주와의 FTA 등이 체결에 실패함으로써 의회 내 반자유무역 세력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WTO에 대한 반대가 증가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함.
 -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DDA 협상의 추진동력이 약화되므로 DDA 협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양자간 FTA가 다자간 협약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WTO 협상테이블로의 신속한 복귀를 촉구함.

- 이는 WTO 내에서만 EU와 미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임.

■ 한국 무역정책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입장 (Alan Larson 국무부 차관, 경제·농업·비즈니스 담당)

○ 한국은 외환위기 발생 이후 신속하게 개혁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경기침체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음.

- 은행 합병 및 청산, 기업부문과 노동시장 개혁 등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취해 온 개혁정책은 전체적으로 옳은 방향이었음.

- 중국과 같은 저임금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런 개혁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것임.

○ 한-미 경제관계는 한-미 정치관계와 안보문제에서 동맹유지의 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관계임.

- 現 노무현 정부의 시장개방 정책과 동아시아 경제중심지가 되고자 하는 정책을 지지함.

-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비즈니스환경 개선, 글로벌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확립 등이 필요함을 강조함.

○ 교착상태에 있는 한·미간 투자협정(BIT)의 처리 등을 통해 향후 한국 무역정책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임.

- 스크린 쿼타 문제의 해결을 통해 BIT의 체결을 이룩해야 함. BIT를 한·미 FTA의 사전단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BIT의 원만한 체결은 한국정부의 자유무역 의지에 대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음.

- 한국경제의 미래를 스크린 쿼타나 농업문제 등에 연계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동아시아 경제중심지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무역자유화와 세계화 정책 등에 연계토록 할 것인가?

- 현재 경쟁정책이나 투자 등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일본과 같은 선상에 있는데 향후 DDA 협상이 재개될 때 한국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 미국은 DDA협상 재개 시 한국이 현재와는 다른 입장을 취해주기를 기대함. 동아시아 경제중심지 달성이라는 정책에 보다 합당한 입장을 취하기를 기대함.

■ 한·미 FTA에 대한 고찰 (Jeffrey Schott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한·미 FTA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함.

- 우선 한·미간 FTA는 양국에 모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초래할 것임. 또한 이러한 경제적 이득은 한·미 FTA가 농업부문까지 포함하여 전 산업부문을 포괄할 때 극대화될 것임.
- 그러나 양국 모두 개혁에 대한 뿌리깊은 저항이 존재함. 특히 FTA로 초래되는 농업분야의 개혁에 대한 저항이 심각함.
-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일본과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됨. 특히, 한국시장에 수출해온 일본과 중국기업들과의 무역관계가 크게 변할 것임.
-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역내에서 일련의 FTA가 연속적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높음.

■ 한·미 FTA에 대한 전략적 접근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의 FTA 정책은 다소 느리지만 진전을 보이고 있음. 현 정부는 FTA 추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동북아 경제중심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통상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수출 확대와 FDI 유치를 위해 주요 교역국가와의 FTA 추진이 불가피함.
 - 한국은 FTA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하였음. 단기적으로는 일본, 싱가포르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과의 FTA, 한·중·일 FTA 등을 추진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양국은 한·미 FTA의 전략적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한·미 FTA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
 -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미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그러나 양국간 시각차이는 큰 편임.
 - 한국은 미국과의 FTA로 농업개방을 우려하고 있으며 스크린 쿼타 문제, 칠레와의 FTA 비준 지연 등으로 FTA 추진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문제점 등이 있음.
 - 한·미 BIT 외에 한·미 FTA를 통해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경제적 이익은 물론 미국과 경제적 동맹관계를 맺어야 함. 안보·군사적 동맹관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한·미 FTA는 한반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미국도 한·미 FTA의 전략적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음. 한·미 FTA를 지나치게 농업개방 및 한·미 BIT와 연계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국과의 FTA를 통해 미국은 동북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데 한·미 FTA의 의미를 부여해야 함.

○ 한·미 FTA는 시의성과 협정내용 중 시의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임.

-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이익 중 한·미 FTA의 목표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즉,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FTA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개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조기에 FTA를 체결하여 양국간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가?
- 전략적 중요성이 높으므로 양국은 FTA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할 필요가 있음. 이는 논의로부터 체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임.
- 급변하는 세계통상환경에서 협정의 시의성이 내용상의 완벽보다 더 중요할 것임.
- 농업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다소의 예외를 인정하는 FTA를 추진하고 나중에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토 론

■ 한국의 FTA 추진전략

○ 한국측에서는 한국의 FTA 정책이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음.

- 한국 정치권에서는 경제 전체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지역에 과다한 국회 의석이 배정되어 있어 농업문제가 관련되는 FTA 추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치구도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FTA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임.
- 한국이 농업부문을 개방하고 FTA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여러 국가와의 FTA를 통한 점진적인 접근방법임.
- 농업부문에 예외를 두는 것이 가능한 국가들과 먼저 FTA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FTA에 대한 노하우(know-how)도 축적하면서 DDA 협상도 진전시켜 나가다보면, FTA의 경제적 이익이 점차 가시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농업부문까지 포함하는 FTA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임.

■ 한·미 FTA의 전략적 중요성

○ 한·미간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추진을 위한 5단계 방안을 제시

- 한국측은 한·미간 FTA가 경제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안보, 군사적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며,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되겠다는 한국의 구상에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

- 동북아 역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제도가 한·미 FTA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한·미 FTA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양국의 정치지도자, 정부관료, 통상전문가들이 명확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 한·미 FT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음의 5단계 진행순서를 제시
 - i) 양국 전문가들이 각자 한·미 FTA에 대한 연구 진행
 - ii) 양국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 진행
 - iii) 기업가들을 포함시켜 연구 진행
 - iv) 정부를 포함시켜 연구 진행
 - v) 협상

■ 한·미 FTA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

- 미국측은 FTA를 통해 농업부문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한국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

- 양자간 FTA는 농업문제를 다루기에는 비효과적인 제도이며 다자간 협상구도가 농업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적합한 제도임.
- 그러나 FTA는 전반적인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사실에는 동의함. APEC의 창설이 EU로 하여금 우루과이 라운드에 복귀하도록 했듯이 FTA의 증가는 세계 자유무역질서 확립에 긍정적 효과가 큼.
- 아시아 지역은 이제 상당히 개방되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이 강한 지역이므로 미국은 이 지역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음.
- 그러므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인센티브가 확보돼 있는 상태임.
-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역할이 크게 향상된 사실에 자극받고 있으며,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향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미국측은 FTA에 대한 일차적인 추진동력이 FTA 상대국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지적.

- 공식적인 FTA 추진의사가 미국측에서 시작되면 이는 미국의 부당한 무역압력으로 비추어 질 수가 있기 때문임.
- 한국측도 이에 동의함. 한·미 FTA 추진이 미국측에서 먼저 시작된다면 한국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미국측의 FTA 추진노력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워짐을 강조.

- 미국 의회 내에는 지금 현재 한국에 우호적인 한·미 FTA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가능성이 있음. 이는 한국이 미국기업의 진출대상국으로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한된 자원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미국의 FTA 추진대상국의 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FTA 추진을 시작하도록 권고함.
 - 만약 한국이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정치적인 의지를 밝힌다면 한국은 즉각 미국의 FTA 대상 리스트에 추진 우선순위 국가로 설정될 것임.
-

부 록

10월 22일 (화)

09:00 ~

Session III: “한·미 투자 및 통상협력”

Trade and Investment

· 발제: 양수길 前 주OECD대사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Calvin Dooley 하원의원

Alan Larson 국무부 차관 (경제, 농업, 비즈니스 담당)

Jeffrey Schott 국제경제연구소(IEE) 선임연구위원

11:30~12:00

종합토론: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IGE) 이사장C. Fred Bergsten 국제경제연구소(IEE) 소장

제8차 한·미 21세기위원회 참가자 명단

〈한국측 참가자〉

권 병 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전 주중대사)
김 경 원	사회과학원 원장 (전 주미대사)
김 대 중	조선일보 이사주필 (현지참여)
김 성 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 진 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문 정 인	연세대 교수
문 창 극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
박 용 옥	전 국방부 차관
백 진 현	서울대 교수 (현지참여)
사 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양 수 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전 주OECD대사)
유 재 건	국회의원 - 불참
전 봉 근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전 종 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 인 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 웅 규	국회의원
최 인 범	경기도지사 경제특보
최 중 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한 승 주	주미대사 (최종화 공사 대참)
현 오 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

(Observers)

이 재 선	재정경제부
박 일 봉	세계경제연구원
Gregory C. Eaves	세계경제연구원

〈 미국측 〉

Desaix Anderson	前 KEDO 사무총장
Martin Bail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 Fred Bergste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Richard Bush	Brookings Institution
Thomas Byrne	Moody's Investor Service
Victor Cha	Georgetown University
Richard Cooper	Harvard University (前 국무차관)
Patrick Cronin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alvin Dooley	House of Representatives
Robert Einhorn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前 비핵확산담당 국무차관보)
Gorden Flake	Mansfield Center for Pacific Affairs
R. Michael Godbow	General Electric Company
E. Monty Graha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Donald Gregg	Korea Society
J. Bradford Jense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L. Oakley Johnson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Arnold Kanter	Forum for International Policy (前 국무차관)
Cho Kong	Shell International Ltd.
Roger Kubarych	HVB America
Alan Larson	Under Secretary, Department of State
James Lister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Winston Lord	Former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Michael McDevitt	Center for Naval Analyses Corporation
Paul McGonagle	Bank One
Marcus Nolan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Karim Pakrava	Bank One
Hugh Patrick	Columbia Business School
Charles Pritchard	Brookings Institute (前 대북특사)
Jeffrey J. Schot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Richard Solomon	US Institute of Peace (前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
James Steinberg	Brookings Institute
G. Richard Thoman	Corporate Perspectives
John William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oseph Winder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Paul Wolfowitz	Deputy Secretary, US Department of Defense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 법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행사 참가비 할인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Website) <http://www.igenet.com>